'수도권 규제완화' 정부 對 비수도권 전면전

"원천 무효" 여·야가 뭉쳤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비수도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만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원천무효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서명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 반발, 여야 구별없다**=지난달 30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자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당장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크게 술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희태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비판적 입장을 밝힌데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등 내홍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또,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은 3일 회동을 통해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모임을 구성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원천 무효화하는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의 비수도권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비상 국회의원모임(가칭)'을 창설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박희태 대표·박근혜 전 대표도 비판 내홍 조짐

비수도권 지방의회도 반대 … '촛불' 이은 정국 변수로

◇**비수도권 반발**=당장,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지방의회도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오는 22일 비수도권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도 3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도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국민 서명운동에 돌 입하기로 했다.

또, 오는 5일 시의회에서 25개 광역·기초의회 의정 담당관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비난하는 입장과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향후 전망**=국회 등 정치권을 포함한 비수도권 진영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당장, 대통령령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특별법은 비수도권 의원들이 전체 국회 의석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대체하는 '지역발전특별법'과 수도권규제 철폐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등 정부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설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내에 발표하게 될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대회

지역균형발전협, 시민단체 공동 22·29일 서울서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비수도권 지자체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정면으로 맞서고 나섰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비수도권 13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위한 전국결의대회 개최와 규제완화 법률 국회 통과 저지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봉쇄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우선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22일과 2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1만3천여 지방민들이 참여하는 서울 상경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 완화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등 국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의 경우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체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체 모임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국회 내 균형발전연구단체 등과 협력해 관련법 개정 봉쇄에 나서기로 했으며,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 방문 등을 통해 저지 투쟁을 확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비한 비수도권의 정책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한 정책연구팀을 운영하는 한편 오는 11월 말과 12월 말에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또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 국가균형 발전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1개월 동안 서울 지하철 1, 3, 4 호선 모니터TV를 통해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제목의 홍보물 상영에 들어간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여야 의원들과 비상모임 만들어 수도권 반대 원내·외 투쟁 병행"

균형발전협 이낙연 대표

"원내 활동 및 장외 투쟁을 병행,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발전 위주의 정책을 저지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방 무시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대표를 맡아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의 원내외 투쟁을 이끌고 있는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3일 "현 정부는 단기간에 성과 내기에 급급해 지방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며 이 같이 다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을 완전히 뒤집고 있으며 여론의 반발은 개의치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공조 투쟁을 하는 데 대해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도 지방의 여론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응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지방 무시 정책을 계속하는 한 이 같은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투쟁 계획과 관련, 이 위원장은 "오는 6일 국회에서 수도권규제 철폐반대를 주장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식으로 비상모임을 출범하고 22일에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최로 서울에서 국회의원,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장, NGO 등 1만 명이 참석하는 지역균형발전촉구 국민대회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대통령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 활용"

2010년까지 지원 … 이달 중 지방 발전 종합대책 발표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이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에 이전,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며 이달 중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우려를 전달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발전 프로젝트 활용 계획과 관련 "이 안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해서 2010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국토운용 정책은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이며 이 기조는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2009년도 예산안 책정의 기조를 변경하면서 예산편성의 기본 정신을 지방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에 두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되는 변경된 예산안의 특징은 70~80% 이상을 지방지원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지역발전 전략을 비롯해 30개 선도프로젝트 정책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지방지원 대책을 소개하며 "이달 중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박 대표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유동성 지원이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키코 사례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공회의소에 공무원이 파견돼 실시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대출을 독려하는 감독을 시작했고, 은행협회도 현장마다 중소기업의 대출요구를 직접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박 대표가 "정부의 각종 좋은 정책에도 불구, 현장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는 듯 보인다. 대통령이 장관들을 각별히 독려했으면 한다"고 말하자 "장관들을 독려하기 전에 직접 진행상황을 감독하고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